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74
----------	------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박홍근 · 오기형 · 김영호  
김희재 · 전해숙 · 기동민  
양정숙 · 천준호 · 백혜련  
홍익표 · 남인순 · 장경태  
의원(12인)

### 제안이유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현행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어느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운임 감면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공익서비스를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로 정의하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31조의2 신설).

다.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려는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각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  
한다.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등) ① 원인제공  
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  
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  
항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의4(운임 감면 법률의 제정·개정 시 사전 협의) 관계 기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lt;신설&gt;</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공익서비스</u> ”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⑥ (생략) <u>&lt;신설&gt;</u>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u>&lt;신설&gt;</u>	제31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신 설>

한다)은 국가 등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을 규정한 각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④ 공익서비스비용의 지급,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등)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 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도시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p><u>&lt;신 설&gt;</u></p>	<p><u>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u> <u>여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u> <u>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u> <u>수 있다.</u></p> <p>⑤ <u>보상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u> <u>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u> <u>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u> <u>우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u> <u>철도운영자의 신청에 따라</u> <u>「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u> <u>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u> <u>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u></p> <p><u>제31조의4(운임 감면 법률의 제</u> <u>정·개정 시 사전 협의) 관계 기</u> <u>관의 장은 운임 감면에 관한</u> <u>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u> <u>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u> <u>여야 한다.</u></p>
---------------------------	--